# 느려 터진 광주시 꼼수 부리는 롯데

## 롯데 월드컵점 불법 확인 100일만에 원상회복 명령

## 일부 특정매장 전환 추진…전대 면적 줄이기 나서

광주시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의 불법 전대(轉貸·재임대)와 관련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렸다.

광주시는 19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2007년부터 대부계약을 한 광주월드컵점이 무단전대와 초과 전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나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는 롯데 측에 보낸 공문에서 "시정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나 고발, 사용허가 취소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시가 시정조치를 요구한 것은 공유재산법에 대부받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남에게 재임대할 수 없게 돼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광주시의 이 같은 조치는 롯데 측의 불법사실이 드러난지 무려 100일이 지난 뒤에야 나온데다, 자체 감사결과 위법이 확인된 뒤로도 해를 넘겨 '늑장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롯데 측은 지난해 광주시 감사에서 "승인한 면적(9289㎡)을 3901㎡ 초과한 1만3190㎡를 전대, 연간 70억원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자진신고한 바 있다.

광주월드컵점이 사용 중인 부지면적은 5만7600여㎡이며 시에 납부하는 대부료는 연간 45억8000만원이다. 이 때문에 전대 수익이 대부료를 내고도 남는 등 엄청난 이윤을 챙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광주시의 조치에 앞서 롯데 측은 이미 40여개의 임대매장에 대해 특정매장으로의 전환을 추진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백화점·할인점 등 유통업체 간 임대계약은 운영주체와 방식, 임차료 산출 등에 따라 통상 직영매장, 특정(매입)매장, 임대갑과 임대을 매장 등이 있다.

광주월드컵점은 250여개 입점 매장 중 임대을과 특정매장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매장은 점포주, 납세자 명의는 유통업체에 있지만 입점업체(임차인)가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내는 방식이다. 전기료, 수도료 등 관리비는 유통업체가 부담하지만 수수료를 내는 등 임대을 방식과 차이가 없다. 이 특정매장은 도소매업진흥법에 따라 직영비율(50%) 유지 의무를 지키기 위한 사실상 편법 운영 형태로도 이미 잘 알려졌다.

롯데측의 매장 전환 시도는 실리는 실리대로 챙기고 불법 전대 면적을 줄여 면죄부를 받기 위한 꼼수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특정매장 면적은 전대면적에서 제외된다.

한편, 롯데측은 특정매장 전환 과정에서 입점업체에 기존 수수료에 1~2%를 올려줄 것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 관계자는 "매장전환으로 전대면적을 회복한다더라 과거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며 "내달 5일까지 개선계획 등을 본 뒤 법적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시는 19일 무단 전대와 초과 전대 등 관련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난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에 원상회복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사진은 롯데쇼핑㈜ 광주월드컵점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 광주·전남 지자체 상시감사 '긴장'

## 감사원 첫 광주 사무소 업무 시작

감사원이 개원 이래 처음으로 광주 현지 사무소를 설치했다.

19일 감사원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 사각(死角)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방행정 감사 2국을 신설, 지난 18일부터 업무를 시작했다.

감사 2국 소관인 광주 현지사무소에는 과장급 책임자를 포함해 모두 9명이 근무한다. 이들은 광산구 무역회관에 사무실을 마련했다. 광주에 감사원 현지사무소가 들어선 것은 감사원 출범 이래 처음이다.

광주 현지사무소에서는 광주를 비롯한 전남·북, 제주도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현지 감사자료 수집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감사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이 광주를 비롯해 대전, 대구에 현지 사무소를 연 것은 밀착감사를 하기 위해서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예산집행, 자치단체장 전횡, 소극적 업무처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현지 정보부족 등으로 감사사각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인력부족도 한계로 작용했다.

실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243개 자치단체 중 204개(84%)에 대해 기관 운영감사를 하지 못했다.

현지 사무소가 설치됨에 따라 지역 자치단체장들은 앞으로 4년의 임기 중 최소 1회 이상 감사를 받게 된다. 구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는 2~3년에 1회 이상, 기초자치단체는 4년에 1회 이상 감사를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현지사무소가 운영됨으로써 감사원 본원을 방문하지 않고도 현지 사무소에 감사자료를 제출하거나 협의할 수 있어 자치단체의 부담이 경감되는 것은 물론, 지역 실정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어 세밀한 감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기존 감사 1국은 서울·경기지역 자치단체를 감사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노인 1천명당 16명 '백세인생'

## 경기도 의정부 115명 1위…목포 28명

우리나라에서 65세 노인 1.6%가 100세를 넘겨 장수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5세 노인인구 1000명당 16명이 꿈만 같던 '백세인생'을 사는 셈이다.

이런 100세 장수 확률은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였는데, 경기도 의정부시가 65세 인구 1000명당 115명이 100세를 넘겨 사는 것으로 나타나 전국에서 최고 장수지역으로 꼽혔다. 광주전남에서는 목포가 1000명당 28명으로 최고 장수지역으로 꼽혔다.

김종인 원광대 장수과학연구소장(보건복지학부 교수)은 100세 이상 초고령자 2명 이상이 사는 전국 114개 시군지역을 대상으로 '1975년부터 2011년까지의 100세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8일 밝혔다. 100세 생존율은 1975년 당시 65세이던 노인이 2011년에 100세까지 생존하는 확률을 본 개념이다.

발표에 따르면, 1975년 당시 65세였던 노인이 2011년에 100세까지 생존할 평균 확률은 인구 1000명당 평균 16명(1.6%)이었다. 성별로는 여성이 21명으로, 남성의 9명보다 2.3배 높았다.

이런 기준으로 볼 때 지역별 최고 장수지역은 경기도 의정부시였다. 의정부시는 2011년 기준으로 '65세 노인의 100세 생존확률'이 1000명당 115명으로 유일하게 100명을 넘어선 지역이었다. 이어 부천시(93명), 성남시(84명), 안양시(80명) 등의 순이었다. 목포시는 28명이었다.

전체적으로는 100세까지 생존율이 10명 이상인 지역이 68곳, 20명 이상인 지역이 20곳이었다. 주목할 것은 100세 생존율이 높은 지역들이 대부분 서울 주변의 위성도시였다는 점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1~10위 지역 중 9곳이 서울 인근의 도시였다.

이 같은 지역별 차이에 영향을 미친 생태학적 요인으로는 ▲ 가구당 월 최소생활비(평균 203만원, 2011년 기준) ▲ 경제활동인구수 (1000명당 평균 90명) ▲ 상하수도 보급비율 (평균 68%, 2005~2010년 기준) ▲ 아스팔트 도로포장 비율(평균 75%, 2005~2010년 기준) ▲ 도시화 수준 등이 꼽혔다.

김종인 교수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과 기반시설, 질병이 발병할 때 신속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는 도시화된 지역 환경 등이 100세까지 장수하는데 잠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 "설 준비는 전남산 농수특산물로 하세요"

## 도, 서울 등 대도시·온라인 등서 대대적 판촉 활동

전남도는 설을 맞아 성수품의 안정적 공급과 농가 소득 증대 및 안정적 판로 확보를 위해 2016 설맞이 농수특산물 판촉 활동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오프라인으로 운영되는 직거래장터는 서울·인천·광주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관공서 광장,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82회 운영된다.

온라인 판촉은 도와 시·군 쇼핑몰 집중 마케팅 24회, TV홈쇼핑 5회 등 다양한 농축특산물 판촉활동이 펼쳐진다. 판촉활동에는 790여 업체가 참여하며, 매출 목표는 100억원이다.

특히, 도 온라인 쇼핑몰인 남도장터는 전남우정청, G마켓 등과 연계한 오픈마켓 판매에도 나서고, 제수용품 및 과일·한우세트 등 300여 품목을 7~40% 할인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도 추진한다.

전남도는 또 시·군, 농협과 합동으로 2월 5~10일 서해안 고속도로 요금소, 각 시·군 버스터미널, 기차역 등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전남산 고품질 브랜드쌀을 홍보할 계획이다.

또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명예감시원 등과 민·관 합동 단속반(22개 반 198명)을 구성해 오는 25일부터 2월 5일까지 농축특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해 위반업소에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설맞이 농수특산물 집중 판촉활동을 위해 '전남 우수농수특산물 브랜드' 책자를 지난해 12월 말 제작해 전국 정부기관, 재외공관, 기업체, 재경향우회, 유통업체 등 3200곳에 배부했다. 전남지사 서한문도 2000부를 발송해 전남 우수 농수특산물로 설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매하도록 협조 요청했다.

전종화 전라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은 "오염되지 않은 땅, 깨끗한 물과 맑은 공기, 온화한 기후 등 천혜의 자연조건에서 생산된 전남의 우수 농수특산물을 설 명절 선물 및 제수용품으로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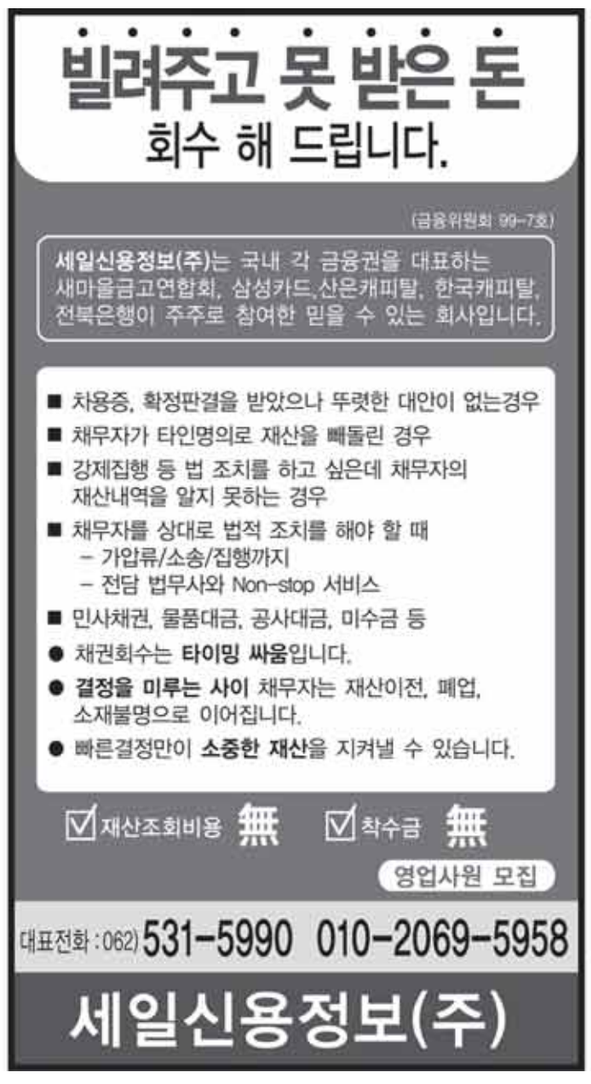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 진곡산단 진입로 개통

광주 광산구 산업단지와 호남고속도로를 잇는 진곡산단 진입도로가 개통한다.

광주시는 20일 오후 2시 광산구 오선동 오선교차로에서 진곡산단 진입도로 개통식을 연다고 19일 밝혔다. 개통식 후 시범주행을 마치고 도로는 곧바로 개통된다.

광산구 오선동, 전남 장성군 남면, 북구 오룡동을 잇는 도로는 길이 5.7㎞, 폭 20m 4차로다. 1520억여원 전액 국비를 들여 2010년 1월 착공해 지난해 말 완공됐다.

광산구 진곡산단, 하남산단, 과기원 등 첨단지구, 전남 장성 나노산단과 호남고속도로간 연결 도로망이 조성돼 산단 입주기업의 물류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하루 4만2000대가량 차량 통행이 예상된다"며 "물류비용 절감은 물론 주변도로 교통여건도 한층 좋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